

문 36. 예비군법령상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임군부대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무기의 유지와 관리
- ②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
- ③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
- ④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

문 37. 예비군법령상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동장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.
- ㄴ. 지역방위협의회는 각급 출장소 단위로는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- ㄷ.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·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ㄹ.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해양수산부 —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
- ㄴ. 행정안전부 —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
- ㄷ. 산업통상자원부 — 원자력안전 사고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)
- ㄹ. 환경부 — 조류(藻類) 대발생(적조에 한정)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4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,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 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문 42.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乙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A시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甲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乙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甲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.
- ③ 乙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A시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하려면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甲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·군·구의 장에게 인력·장비·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,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재난의 응급대책·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·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-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한다.
- ②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는 ‘사회재난’에 해당한다.
- ③ ‘해외재난’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에 한한다.
- ④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‘긴급구조기관’은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.

문 4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의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및 재난관리의무 위반행위의 징계 등의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제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,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2천 명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·점검하여,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
- ③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.
- ④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